

3.1운동의 정치적 의미와 과제

백종국 (경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1. 삼일운동의 역사적 의미

기미년 3월 1일에 발생한 삼일운동은 그 뒤 1년여 동안 국내외에서 발생한 항일민족독립운동의 총칭이다.(이만열 2019, 1-2). 일본경찰의 통계에 따르면 1919년 3-5월간 전국 218개 군 중 212개 군에서 1,542회의 시위가 발생했는데 202만 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는 1년 간 1천만 명이 참가했다고 기록되어있다. 이 운동을 탄압하려는 일본의 무차별 살육행위로 인해 3-5월 사이에 46,948명이 체포 투옥되었고, 15,900명이 부상당하고, 7,500명이 살해되었다. 47개 교회당과 2개 학교, 그리고 715채의 한국인 민가가 불태워졌다. 이는 일본 측의 공식 통계이므로 실제로는 더욱 잔혹하고 광범위한 파괴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삼일운동의 높은 민중적 참여도와 지역적 포괄성으로 인해 삼일운동 이후의 한국정치체제들은 이 삼일운동을 체제의 정당성과 법통성의 근거로 삼고자 노력했다.¹⁾ 대표적인 예로서 대한민국 헌법은 그 전문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온 체제적 정당성의 근거라 할 수 있다. 삼일운동의 정치적 의미를 찾는다면 바로 이러한 대한민국 체제의 수립을 첫째로 손꼽을 수 있다.

문제는 삼일운동의 이해가 역사적 맥락과 권력투쟁의 과정에서 수시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삼일운동의 동기와 주체,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민주공화정 탄생의 기원, 윌슨주의의 성격과 삼일운동에 대한 영향, 한국 민족의 형성, 세계사에서의 지위 등에 대해 수많은 연구들이 있고 또한 서로 다른 해석들이 경쟁하고 있다. 삼일운동의 연구들은 대체로 역사적이고 서술적이며 대체로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가지는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군사독재로 인해 체제의 정당성에 의문이 가해지면서 삼일운동의 해석에 있어서도 이데올로기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마르크스주의적 해석과 뉴라이트적 해석을 들 수 있다. 한국역사연구회와 역사문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한겨레신문이 후원한 3·1운동 70주년 기념논문집을 보면 이 운동은 실패한 운동이며 성공한 운동이 되려면 역시 노동계급이 주체가 되어야한다고 결론을 내렸다.(한국역사연구회·역사문제연구소 1989, 35). 이들의 주장은 사실관계에서 타당성이 약하다. 그들의 추정을 따르더라도 당시 총인구의 0.2%에 불과하고 그것도 대도시에만 분포하고 있던 약 4만 명의 노동자가 농업 사회에 사는 수천만 민중의 주체가 되기는 불가능하다.²⁾ 마르크스주의적 해석에 자극을 받아 조직된 뉴라이트운동은 이승만의 밀서가 3·1운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해석의 다른 수준이 아니라 역사적 자료의 신빙성이 문제가 되는 가짜뉴스에 불과하다.³⁾

자의적인 해석의 혼란을 제거하려면 사회과학에서 정립된 방법론을 활용한 분석이 필요하다.⁴⁾ 이 논문은 이미 발굴된 신빙성있는 자료들의 체계적 탐구에 정치경제학 분야에서 발달한 지배연합분석을

1) 여기서 정당성(legitimacy)이란 피치자들이 체제의 권위에 복종해야할 이유 즉 지배의 타당성을 의미한다.(Weber 2011, 11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13-21). 법통성(legal genealogy)이란 이러한 지배의 정당성이 시대를 거듭하여 축적되면서 나타난 제도적 전통을 의미한다.(서희경 2014, 256; 윤대원 2010).

2) 당시 인구는 약 1천6백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박경숙 2009, 32).

3) 뉴라이트 주장으로는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2/24/2019022400050.html>. 2019.3.19. 검색. 이에 대한 검증으로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의 “대체로 사실이 아님” 결론 참조. <http://factcheck.snu.ac.kr/v2/facts/1379>. 2019.4.8. 검색

4) 여기서 “과학”이란 보다 신빙성있는 진실을 얻기 위해 방법과 절차를 활용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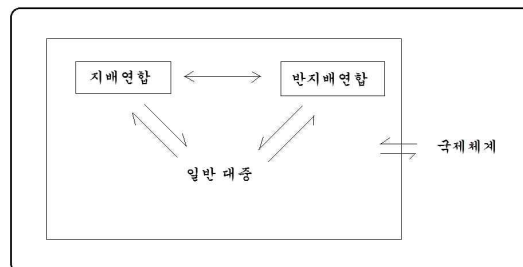
적용해보는 논문이다. 이미 일차자료 연구를 통해 방대한 사료들이 발굴되고 있으나 사실상 그 자료들을 객관적으로 다루는 방법론은 매우 부족하다. 지배연합분석의 역사적 모델은 삼일운동의 서술적 연구들이 자칫 빠지기 쉬운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을 제거하고 과학적 분석을 가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분석모델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 분석모델에 따라 삼일운동의 과정과 성격, 민족국가 형성, 개신교의 역할, 역사적 교훈 등의 주제를 다루고자 한다.

2. 삼일운동의 지배연합분석

삼일운동의 과학적 분석은 현재의 혼란과 미래의 도약을 위해 극히 필요하다. 권력 쟁취를 위한 이데올로기적 상대화로 인해 나타나는 갈등을 줄이고 공동체적 합의와 상식의 폭을 넓히려면 과학적 합리성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삼일운동의 의의를 정치적 필요에 따라 취사선택하고 심지어 객관적 사실조차도 왜곡하는 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집단적 노력이 필요하다. 역사구조적 방법론 중의 지배연합분석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조선독립운동에 따른 독립선언서의 채택은 1919년 3월 1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1919년 2월 1일 “무오독립선언서”(만주노령유지), 2월 8일 “2·8독립선언서”(재일본동경조선청년독립단), 3월 1일 “기미독립선언서”(조선민족대표 33인), 3월 17일 “조선독립선언서”(조선국민회의), 3월 20일 “대한국민회의 독립선언서”(대한국민회의), 4월 “독립선언서”(대륙대한독립단), 10월 31일 “대한독립선언서”(대한민족 대표), 등 약 20여 개에 달하고 있다.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일운동과 “기미독립선언서”가 독립선언의 대표로서 존중받는 이유는 이 선언이야말로 조선인 절대 다수 세력의 연합적 산물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지배연합분석의 역사적 모델



지배연합이란 특정한 시점에서 해당 공동체의 지배를 관철하는 세력들의 연합을 말한다.(백종국 1993). 어떤 공동체의 지배는 불가피하게 세력들의 연합에 의해 수행되지 않을 수 없다. 공동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세력연합의 성격도 강해지는 데 부족국가에서 근대국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 경향은 확정적이 되었다. 필연적으로 공동체의 지배권을 놓고 경쟁하는 반지배연합이 존재하게 된다. 아주 특별하게 어떤 공동체내에서 지배권을 놓고 경쟁하는 반지배연합이 일시적으로 없을 때가 있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 반지배연합의 존재는 필연적이다. 지배연합과 반지배연합은 공동체의 몸통이기도 한 일반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해당 공동체의 통치기구를 누가 장악하느냐의 경쟁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쟁은 공동체 내부와 외부의 두 가지 차원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퍼트남의 방식에 따르면 “이중차원게임(two-level game)”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Putnam 1988).

지배연합의 분석은 합리적 모델과 역사적 모델로 나뉘고 있다.(백종국 2009, 71-78). 라이커(Riker)나 액셀로드(Axelrod) 등이 주도하는 합리적 모델은 개인 행위자를 주제로 삼고 있으며 주로

5)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9060>. 2019.4.1. 검색

서구 의회정치의 암흑 상자를 푸는 분석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매우 정교한 분석이 가능하지만 매번 비현실적인 조건을 분석의 전제로 사용하기 때문에 현실성과 적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다 보편적인 적용을 위해 역사적 모델이 발달했다. 허시만(Hirschman)이나 오도넬(O'Donnell), 거비치(Gourevitch) 등이 개발한 이 역사적 모델은 후진국의 국가형성이나 발전전략을 분석하는 데 효율적이다. 개인 행위자도 중요하지만 주로 계층이나 집단행동을 추적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이다. 삼일운동의 목적이 대한민국의 독립이라는 것이라면 삼일운동의 분석에는 당연히 지배연합분석의 역사적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배연합분석이 개발한 세 가지 명제는 삼일운동의 분석에도 유용하다. 첫째는 크기의 원칙이다. 최소지배연합이 될수록 더욱 안정적이라는 원칙이다. 둘째는 이데올로기의 원칙이다. 지배연합 구성원의 이데올로기가 동질적일수록 안정적이라는 원칙이다. 셋째는 전환의 문턱이다. 반지배연합의 도전 강도에 따라 체제 전환의 문턱이 존재한다. 삼일운동의 분석에도 핵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명제들이다.

3. 삼일대연합의 형성과 성과

1910년 8월 29일에 한일합방조약이 공포되었다. 대한제국은 조선으로 개칭되고 일본의 조선총독부가 설치되었다. 초대총독인 테라우찌가 이끄는 재판소를 비롯한 총독부 통치기구가 설치되었다. 대한제국의 내각은 해산식을 거행했고 한일합방에 기여한 조선인 75명에게 일본의 작위가 주어졌다. 토지조사령과 회사령이 공포되어 조선의 경제를 장악하는 체계가 설치되었다.

이 시기로부터 조선반도의 일본지배가 시작되었지만 실제로는 일본과 그들에 협력하는 친일세력의 식민지 지배연합이 등장했다. 조선북부와 남부에 설치한 2개 수비대와 해군기지의 정규 병력이 핵심 무력기구였지만 실제로 통치에 활용된 것은 1천 개소의 헌병대에 배치된 8천명의 헌병과 7백 개소에 배치되어있는 6천여 명의 경찰들이었다.(한국역사연구회·역사문제연구소 1989, 90).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1918년 조선총독부 및 소속 관서 직원 수는 촉탁과 고용원을 포함해 21,302명이다. 그 중 일본인은 12,865명, 조선인은 8,437명이었다. 조선인이 40% 가까이 되지만 말단 순사를 보조하는 순사보가 3,067명, 헌병보조가 4,749명으로 합계가 7,816명으로 93%가 하위직이었다.⁶⁾ 경제적·폭력적 수단을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는 식민지 당국과 민중적 차원에서 이 지배를 실천하는 극소수 친일부역세력의 지배연합은 크기의 원칙으로 볼 때 매우 효율적이고 안정적이었다.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연합에 대항하는 조선인들의 반지배연합 활동은 매우 초라했다. 한일합방 초기에 대한제국의 관료출신들을 중심으로 국권의 상실에 저항하는 의거들이 있었으나 그 수는 매우 적었다. 양반계층 중심의 의병 투쟁도 나름 격렬하게 전개되었으나 1911년을 기준으로 교전 횟수는 41회에 그쳤고 참가자도 272명, 사상자는 36명에 불과하였다.(이만열 1996, 200). 약 1천6백만 명으로 추정되는 일반 대중에 비하면 일본제국주의의 국권 침탈에 저항하는 정도는 극히 미미하였다.(박경숙 2009, 32). 이는 이 시기에 있어서 대한제국이 피치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음을 의미한다. 여론의 객관적 측정이 불가능하지만 1862년의 임술민란에서 1894년의 갑오농민혁명에 이르는 37건의 대소 농민운동들이 이 상황 즉 대한제국의 정당성 약화를 대변하고 있다. 구한말에 있어서 민중은 노예와 같은 상황이었고 양반계층으로 대변되는 지배계층의 착취와 약탈은 조선의 자주권에 대한 관심을 흐리게 만들었다. 조선왕조라는 약탈자가 일본왕조라는 약탈자로 바뀐다 해서 피치자에게는 크게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다.

국제체계에 있어서도 대한제국은 자신들의 자주권에 열강의 관심을 끌어들일 만한 전략을 지니지 못하였다. 고종황제는 자주권의 수호를 위해 조선반도 내의 이권을 고루 나누어주는 세력균형외교를 추구했다. 그러나 이 결과로 러시아의 극동진출이 가시화되었다. 러시아의 남하를 두려워하는 영국에 의해 영일조약이라는 형태로 일본의 조선반도 우위권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박지현 2014, 52). 뿐만 아니라 루즈벨트의 표현에 따르면 대한제국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였으며 미국은 형식적 조약과는 상관없이 일본으로부터 러시아의 남진 저지와 필리핀 영유권에 대한 보

6) <https://news.joins.com/article/6704225> 2019년 3월 30일 검색.

장을 받고자 태프트-카츠라 비밀조약을 추진하였다.(정동귀 1982, 258).

1919년에 일어난 조선인들의 독립에 대한 열망은 한일합방 이후 10여 년 동안 진행된 상황과 깊은 관계가 있다. 조선의 양반계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처참한 약탈행위와 민주공화제에 대한 이해의 증가, 그리고 민족주의를 전파하는 국제적 환경의 변화가 그것이다.

일본제국주의자들에 의한 약탈과 폭력은 상대적으로 정치권력의 향방에 둔감한 다수 대중들조차도 각성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위협이었다.⁷⁾ 일본은 조선을 합병하자마자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토지를 약탈하였다. 이후에 회사령, 범죄즉결령, 토지수용령, 어업취제규칙, 관유재산관리규제, 교육령, 이식제한령, 국징수령, 토지조사령, 사법경찰직무령, 영장집행령, 은행령 등의 규칙을 연달아 발표하였다. 이러한 조치로 발생하는 극심한 약탈과 직접적인 폭력행사에 대해 블라디보스톡 대한국민회의는 그들의 『독립선언서』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소위 척식회사와 금융조합은 민간에 빛을 풀어주어 우리의 전지를 탈취해 가며 우리의 가옥을 점유하는 것이 그 사업이며, 소위 순사헌병은 불량배와 악한을 다 사용하여 우리의 생민을 학대하며 우리의 부녀자를 강간하는 것이 그 이루어 놓은 업적이다.”(이연복/윤종일 1994, 371).

사회지도층 내에서 민주공화제에 대한 인식도 급속히 증가하였다.(김정인 2017). 국민주권론과 민주공화정에 대한 주장은 조선 말기부터 있었다. 그러나 자주독립운동의 주류는 도리어 황제권을 강화하는 절대왕정을 꿈꾸었고 대한제국의 성립으로 이어졌다. 대한제국이 일본과 합병되고 1911년에 중국의 신해혁명이 민주공화정을 기치로 성립되자 입헌왕정보다 민주공화정을 주장하는 세력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합병조약 직전 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총회는 민주공화정의 임시정부를 추진했다. 1910년에는 연해주에 한인 권업회가, 1914년 하와이 대한민국회 지방총회가 민주공화제의 임시정부를 추진했다. 1917년 7월 상해에 14명의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대동단결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은 고종황제가 주권을 포기했으므로 이 주권은 국민 일반에게 양여되었다는 국민주권설을 제시하였다. 민주공화제에 대한 인식의 확대야말로 적어도 지식층 일반에게 새로운 국가 독립의 열망을 불러일으킨 주요 요인이 되었다.

국제체계로부터 밀어닥친 민족자결주의는 이제 새로운 민주공화제의 독립 국가를 꿈꾸는 조선인들에게 커다란 봉기의 자극을 제공해주었다. 세계제1차대전의 종료를 앞두고 주요 강대국들은 민족자결주의를 제국주의 잔재의 전후처리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볼셰비키혁명을 통해 소비에트 정권을 수립한 레닌은 1917년 11월 『평화선언』을 통해 민족자결의 원칙을 주창하였다. 모든 민족은 외국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국체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선언이었다.(Lenin 1975, 541). 독일은 레닌의 민족자결론을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를 분리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하였다.(이종훈 2010, 305). 미국 대통령 윌슨은 레닌의 평화선언 두 달 뒤인 1918년 1월에 유명한 14개 조항을 세계제1차대전의 종전 원칙으로 선언했다.(Link 1984). 민족자결주의가 전승국의 식민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독립을 열망하는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에게는 큰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다.

삼일운동은 이러한 국내외 구조에 자극을 받은 독립운동가들이 일구어낸 대연합의 산물이었다. 삼일운동의 주체가 대한민국의 역사에 보기 드문 대연합인 이유는 삼일운동에 대한 전 민족적 참여의 규모를 보아도 잘 알 수가 있다. 박은식은 그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서 1년 동안 1천만 명이 참가했다고 서술했다. 조금의 과장이 있었다할지라도 사실상 동원 가능한 성인인구 전원이 삼일운동에 참여했다는 뜻으로 읽혀지고 있다. 경남 진주의 사례가 그러하다. 3월 18일 날에 시작된 진주 지역의 만세 시위에 대해 김중섭은 첫 날 3천 명, 다음 날 8천 명이 참여했다고 기록하고 있다.(김중섭 1996, 366). 당시의 진주 인구가 1만 2천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박은식의 기록도 그다지 큰 과장이 아니다. 처음에는 양반과 지주계층의 지식인들이 주도했지만 점차 국민 다수를 이루고 있는 농민

7) 미국기독교연합회 동양문제위원회는 1919년 5월에 발표된 보고서에서 삼일운동의 직접적 원인은 윌슨의 민족자결주의가 아니라 일제의 무단통치에 고통 받던 한국인들의 독립열망을 강조했다.(이만열 1991, 337).

과 노동자들의 참여로 확대되고 있었다. 예컨대 서울을 제외한 경기지방의 시위참가 피고소자 비율을 보면 3월 초에는 지식인과 학생 계층이 66%였지만 4월에 이르러 농민 계층이 90%를 차지하고 있었다.(한국역사연구회·역사문제연구소 1989, 250).

삼일대연합은 사회계층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와 지역성을 뛰어넘는 참여로 인해 전무후무한 정치대연합으로 나타났다. 삼일대연합의 기원은 1917년에 『대동단결선언문』으로 대연합을 예고했던 상해의 신한청년당이라고 할 수 있다.(독립기념관 1989, 8). 신한청년당의 대표 여운형은 1918년 11월에 월슨의 특사 크레인(Charles R. Crane)이 상해를 방문하자 그의 환영집회에 참석하여 조선독립의 문제를 협의하였다. 그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신한당 긴급회의를 한 후 <한국독립에 관한 진정서> 2통 작성하여 중국대표단 고문 밀라드(Thomas Millard)에게 전달을 부탁하고 김규식을 한국 대표로 선정하여 1919년 2월 1일 파리로 출발시켰다. 또한 선우혁, 서병호, 조용은, 이광수, 여운형, 등을 국내와 일본, 만주, 노령에 파견하여 독립만세운동의 참여를 독려했다. 파리평화회의의 참여자들이 조선인들의 독립의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비교적 국제정세를 빨리 파악할 수 있는 해외동포들의 참여도 활성화되고 있었다. 만주의 간도지방과 러시아령의 연해주 지방에 활동하고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대한국민의회를 조직하고 파리평화회의의 대표 파견과 만세운동을 기획하였다. 안창호를 위시한 미국의 독립운동가들도 대한국민의회를 조직하여 파리평화회의의 대표 파견을 의결하였다. 미국정부의 방해로 대표의 파견은 무산되었지만 이들의 활동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서 만세운동에 활력을 불어넣게 되었다. 재일본 한국유학생들은 학우회나 웅변대회를 통해 조선독립을 고취하고 신한당의 요청이 있자 2월 8일에 바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게 되었다. 이 독립선언서가 국내로 반입됨으로서 삼일독립선언서를 촉발시켰다.

서울에서의 삼일운동은 범종교적 연합으로 나타났다. 일본제국주의의 무단통치로 인해 언론,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에서 종교단체들이 가장 활동적이었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이승훈과 천도교의 최린, 그리고 이들의 연결을 맡았던 함태영이 대표적인 인물들이다.(김정희 2019). 또한 신홍사 승려인 한용운도 불교 대표로 참여할 수 있었다. 천도교와 기독교, 불교의 연대가 성립되자 학생 지도자들도 독자적인 독립운동 계획을 포기하고 이 연대활동에 참여하였다. 학생들의 참여가 중요했던 이유는 이들이야말로 독립선언서를 전국방방곡곡에 전달하고, 배포하고, 시위를 조직하는 중심이 되었기 때문이다.(백주년기념회 2019).

조선 사람 모두가 이 삼일대연합이라는 반지배연합에 참여한 것은 아니다. 우선 종교단체로서 천주교와 유교가 참여하지 않았다. 유교는 한용운이 접촉하였으나 소극적이었고 천주교는 철저한 정교분리정책으로 인해 만세운동에의 참여를 금지했다.⁸⁾ 김윤식, 박영효, 윤치호 등의 구관료들은 최린이 가장 먼저 접촉한 사람들이었으나 한결같이 거절당했다.(독립기념관 1989, 17). 이에 실망한 최린은 그의 자서전에서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그 사람들은 이미 노후한 인물들이다. 독립운동은 민족적 제전이다. 신성한 제수에는 늙은 소보다 어린 양이 좋다. 차라리 깨끗한 우리가 제물이 되면 어떠냐.”(독립기념관 1989, 17).

이상의 역사 자료를 기반으로 3대 명제를 적용해보면 반지배연합으로서 삼일대연합은 그 자체가 사실상 기적과 같은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지배연합분석의 3대 명제에 대입해보면 알 수 있다. 첫째 크기의 원칙에서 벗어나 있다. 거의 모든 정파와 지역을 다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모두의 이익을 다 보장할 수 없었다.⁹⁾ 둘째 이데올로기의 원칙에도 벗어난다. 서로 다른 가치체계와 논리를 가진 정파와 인물들이 한국 역사상 이처럼 한 연합 안에 머무른 경우가 없다. 셋째 전환의 문턱이 너무 높았다. 일본이 주도하는 식민지 지배연합은 세계제1차대전 승전국으로서 강고하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지니고 있었다. 반지배연합이 이를 돌파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전략과 무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8)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52>. 2019년 3월 30일 검색.

9) 손병희의 전기에 따르면 심지어 이완용까지도 독립선언서에 끌어들이고자 했다고 한다. 당시에 이완용도 총독부에 의해 토사구팽당한 처지란 점과 매국노까지 독립을 원한다면 삼천만이 다 독립을 원하는 상정이라는 이유였다고 한다.(의암손병희선생기념사업회 1967).

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일시적이었지만 자생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삼일대연합은 기적적 사례에 해당한다.

삼일대연합을 이끄는 지도부의 전략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강대국과 일본의 선의에 호소하는 것이었다. 삼일대연합을 이끈 최린이 조선인의 독립역량을 묻는 일본관사의 질문에 “병합 후 10년을 경과하는 동안 조선인의 지식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조력을 받으면 독립국으로 설 수 있다”고 답변한 데에서 이 맥락을 잘 이해할 수 있다.(한국역사연구회·역사문제연구소 1989, 441). 국제관계가 각국의 냉철한 국익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삼일대연합은 동북아 세력균형에 기대어 독립을 유지하려는 고종황제의 국제적 무지함과 유사하다. 국제관계에 대한 고종황제의 무지에 대하여 미국의 루즈벨트가 한 언론사에 기고한 글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완전히 일본의 것이다. 과연 한국의 독립은 확실히 조약에 의해 엄숙히 약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스스로가 그 조약을 이해하기에는 무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를 갖지 않은 다른 나라가 자기를 희생해서, 한국 자신이 할 수 없었던 것을 한국인을 위해 감히 행동할 것이라고는 아무리 해도 생각할 수 없다. 또한 그 조약은, 한국이 훌륭히 자치할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전제에 입각한 것이었다.” (Theodore Roosevelt가 Outlook지 1914년 9월 23일자에 기고한 글. 정동귀 1982, 265.에서 재인용.)

삼일대연합의 운동전략을 둘러싼 “독립청원—독립선언 논쟁”이 이러한 문제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김정희 2019, 29-32). 삼일대연합의 목적은 일본의 침략과 착취를 청산하는 것 즉 대한민국의 독립이고, 그 당시에 취할 수 있는 가장 가능한 수단은 일본과 미국과 파리강화회의의 참석 국가들에게 대한민국의 독립을 청원하는 것이었다. 결국 이 수단이 사실상의 목적인 셈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청원이어야 하고, 합법적이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시위로 표현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언의 초안자들인 최린과 함태영이 독립청원이 아니라 독립선언이라는 제목을 채택한 이유는 선언이라는 용어가 일본의 식민지체제가 지니는 부당성을 부각함으로써 독립청원의 의지를 더욱 강력히 표명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독립선언서에 대표자들의 인감을 날인하고, 학생들이 모인 파고다 공원을 피해 명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종로경찰서에 스스로 신고하여 전원이 체포당한 과정은 이러한 독립청원의 합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삼일대연합은 그들이 준비한 선언서를 기준으로 볼 때 어느 것도 달성되지 못했다. 한국인의 독립청원에 대해 일본은 가혹한 탄압과 살상으로 응답하였다. 한국인의 독립청원에 호의적일 것으로 기대했던 미국은 “윌슨 대통령의 선언은 일본 영토에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냉정히 선을 그었다.(한국역사연구회·역사문제연구소 1989, 65). 파리강화회의는 한국의 대표권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예 한국문제를 다루지도 않았다. 비폭력 무저항운동의 선언이 종교단체들을 참여시킨 삼대 전제(대중화, 일원화, 비폭력) 중 하나였지만 비폭력의 선언도 일본의 유혈적 진압과 이에 따른 민중의 반발로 실패하였다. 일본 측 발표에 따르면 1919년 3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경찰관서 87개소, 헌병대 72개소, 군청·면사무소 77개소 등 278개소의 관공서가 파괴 내지 방화되었다. 3월 상순에 발생한 183회 시위 중 22%가 폭력투쟁이었지만 4월 상순의 292회 시위에서는 47%가 폭력투쟁이었다. 야만적 탄압과 시위대의 폭력적 대응이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었다.(한국역사연구회·역사문제연구소 1989, 245-253).

그러나 삼일대연합은 원래 목표로 선언되지 않았던 바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민족국가의 형성이다. 한반도의 역사상 거의 기적처럼 나타난 대연합은 그것이 비록 일시적이었다 할지라도 한반도에 대한민국이라는 민족국가를 만들어낸 역사적 계기가 되었다.

4. 삼일운동과 민족국가 형성

삼일운동의 정치적 의미는 대한민국이라는 민족국가의 형성에서 찾을 수 있다. 1919년 이전까지 한반도에서는 근대적 의미의 민족국가가 존재하지 않았다. 국가의 기원에 관한 인류학적 고찰을 참고하

면 원시적 상태에서부터 갈등과 통합을 향한 공동체적 노력으로 통치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정치체제 즉 국가가 등장하고 있었다.(Cohen and Service ed. 1978). 인류역사에서 국가는 부족연맹체—대왕정—중세봉건국가—근대절대왕정—민족국가 순으로 진화해왔다. 어느 경우든지 정당성과 강제성을 가진 권위의 확보가 핵심이었고 관료체제의 수립이 이를 위한 주요 수단이었다. 각 체제의 성격에 따라 통치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이데올로기들이 발달했다. 한반도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유럽풍의 중세봉건 국가가 나타나지 못했다. 일찍부터 근대절대왕정과 유사한 양반관료제국가가 등장했었다.(강광식 2008; 김용흠 2010).

근대적인 민족국가는 두 단계의 역사적 계기를 통해 점진적으로 형성되었다. 첫째는 1648년의 웨스팔리아조약이다. 유럽 내륙에서 발생한 신구교간의 갈등인 「30년전쟁」을 정리하면서 신성로마제국을 해체하고 제국을 구성했던 국가들의 독립을 인정한 조약이었다. 민족국가의 주권(sovereignty)을 국제적으로 확인한 조약으로서 민족국가체제의 토대가 되었다. 둘째는 1918년의 윌슨선언이다. 민족자결주의 선언으로서 각 민족은 자신의 체제를 구성할 권리를 가진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었다. 전자가 제국주의적 강대국들 사이의 민족국가 형성을 다룬 것이라면 후자는 식민지국가들의 민족국가형성을 격려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물론 현실적 개별사례의 운명은 참전국들의 이해관계에 좌우되었지만 이후로 세계체제는 민족국가간의 관계를 기본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국제규범이 형성되었다.

민족국가체제가 나타났다고 해서 모든 민족이 자신의 국가를 당연히 가지는 것은 아니다. 국제적 변화의 국내적 적용은 그 변화에 부응하는 국내적 역량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었다. 한반도의 독립국가 인정을 둘러싼 각종 국제 조약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스스로 국가를 형성할 역량이 있는 공동체들만이 스스로의 민족국가를 주장할 수 있었다. 어떤 지역의 민족들이 정치, 군사, 문화, 경제적으로 국제적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지역에 이권을 갖고 있는 강대국들에 의해 자로 재듯이 분할 당할 수도 있다. 아프리카 대륙의 현 국경선이 이 현상을 대변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남북분단도 대표적인 사례이다. 강대국들이 이러한 자의적 영토분할을 일삼은 명분은 자주독립의 능력이 없는 나라들은 자신들 뿐 만 아니라 주변국들조차도 불안하게 만드는 국제적 무질서의 온상이 된다는 점이었다. 실제로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많은 제3세계 국가들에서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다. 삼일운동은 한민족이 이러한 민족국가체제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증거로 나타나게 되었다.

대한민국이라는 민족국가의 존재는 한일합방과 그로 인한 질곡으로 인해 촉발되었다. 오랜 세월 동안 한반도를 지배한 조선은 종족과 국가가 일치된 존재였었다. 특히 세종의 한글 창제 이후 조선은 주변 국가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차별적 동질성을 지니고 있었다. 조선의 통치하에서는 정치적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민족” 보다 왕조의 “신민”으로서의 존재가 일상적이었다. 그러나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민족 혹은 민족국가의 의미가 급부상하였다. 이민족의 직접적인 통치가 민족 간의 차별성을 선명하게 부각시켰기 때문이다. 이 민족 개념의 등장에는 국제적 영향이 핵심적인 변수였다. 민족이라는 개념은 구한말 민족적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본 유학생들을 통해 수입되었다.(이정식 1982; 백종국 2018, 189-193). 일본제국주의의 한국 침탈이 강화될수록 한국인 사이에서는 민족적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경향이 더욱 강해졌다.¹⁰⁾

민족은 삼일운동 당시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수입 용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미독립선언서는 민족이라는 개념의 일상화를 당연시하는 문구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선언에 따르면 독립선언의 목표는 “民族自存의 政權을 永有”하는 것이며 “民族의 恒久如一한 自由發展”을 위한 것이다. 지난 10여 년간에 걸친 “異民族 箝制의 痛苦”가 선언의 동기인데 이민족의 국가인 일본은 조선의 “民族的 尊榮”을 훼손하였다. “民族的 良心”을 증진시키려면 “民族的 獨立”이 최대의 당면과제이다. 인류발전을 위해 “卓犖한 民族心理”와 “民族的 要求”로서 “兩 民族間”의 화해가 필요하다. 이 선언과 운동이 세계에 우리의 “民族的 精華”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는 “正義, 人道, 生存, 尊榮을 爲하는 民族的 要求”이며 “民族의 正當한 意思”이라는 것이 삼월 일일에 배포된 독립선언의 요지이다.

10) 물론 이와 정반대로 동북아의 상고사를 꾸며내어 한일의 인종적 일치성을 강조하는 주장도 있었다. 최동은 그의 『조선문제를 통하여 보는 만몽문제』(1932)에서 한국과 일본의 종족적 일치성을 강조하면서 “이 땅에서 일선 양 민족을 직계로 하고, 기타의 혈연 종족을 방계로 하여 장래 독특한 하나의 대문화의 건설을 국책”으로 하자고 주장했다.(이문영 2018, 228에서 재인용).

민족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구성은 1919년 3월 삼일만세운동의 필수적이고 당연한 결과이다.(고정휴 외 2010, 13-29). 삼일운동 봉기와 동시에 지하신문으로 발행된 『조선독립신문』에 따르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형성을 위해 대략 6개의 임시정부안이 제기되었다. 그 중 3개는 어느 정도 현실화되었는데, 3월 21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대한국민의회 임시정부가, 4월 11일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4월 23일 한성에서 대한공화국이 출범하였다.¹¹⁾ 임시정부의 분립이 초래할 비효율과 위험을 고려하여 마침내 9월 11일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탄생했다. 이 통합 임시정부는 한국독립운동단체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는데 1919년 말까지 각국에 분포되어있던 45개 단체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충성을 맹세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반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대통령을 비롯하여 10명의 내각과 각 세력을 대표하는 의정원을 구성하여 3개 임시정부의 연합정부임을 분명히 하였다.(고정휴 외 2010, 29). 대한민국임시헌법을 제정하여 법치주의의 틀을 마련하였다.(박진철 2016). 국무령령 제1호로 임시연통제를 공포하고 교통부를 설치하여 국내의 독립운동의 조직화를 꾀하였다. 주미위원부와 주파리위원부를 설치하여 한국독립을 위한 서방 국가들의 여론을 환기하고 주요 국제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코민테른에 대표를 파견하여 1920년 한국독립위원을 위한 한쏘비밀협약을 체결하였다. 1921년에는 손문의 중국정부로 사실상의 국가승인을 취득하였다. 기관지인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다양한 역사편찬작업을 시작하였다. 군사력을 갖추기 위해 무관학교를 설립하고 참의부를 조직하여 국내 유격활동을 시도하였다. 대동아전쟁이 시작되고 일본의 군사력이 더욱 증강되어 정규전으로 승산이 없어 보이자 한인애국단이라는 특공대를 조직하였다. 이 중에서 이봉창, 윤봉길, 이덕주, 최홍식의 의거가 특히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1940년 9월 17일에는 마침내 대한광복군이 출범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삼일대연합의 제도적 표현인 만큼 대연합이 가지는 장단점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었다. 가장 큰 장점으로서 한반도와 한민족을 통치하는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1930년 이후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에 이르기까지 진행된 임시정부의 법통성 논쟁이 있어왔지만 이는 당대의 상황을 대변하고 있을 뿐이다. 적어도 1919년 9월 현재에 있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반도와 한민족을 대변하는 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지위를 얻고 있었다. 문제는 이 영토와 국민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관철할 수 있는 주권 행사의 역량이 상대적으로 너무 빈약하다는 데 있었다. 임시정부는 수립 직후부터 한반도의 실효적 지배 즉 해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당시 한반도를 강점하고 있는 일본의 강대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극복하기에는 전환의 문턱이 너무 높았던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 출범을 선언하는 순간부터 지배연합과 반지배연합의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한반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일본 식민지 당국에 대하여는 반지배연합이지만, 이미 선언된 국가로서는 내부에 지배연합과 반지배연합을 갖게 되었다. 신용하의 정리를 보면, 국가로서의 임시정부를 장악하는 출범초기의 지배연합은 신한청년당과 이들의 동조자들이었다. 신한청년당의 여운형과 그의 동조자들은 각지를 방문하여 상해의 독립운동본부 설치를 권하였다. 이들이 주축이 되어 4월 11일 새벽에 대한민국의 수립을 선언하였다. 문제는 이들이 스스로 지배연합의 지위를 구축하기보다 독립운동의 명망가들을 끌어들이어 대연합을 추구하는 데 몰두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수차례의 조정과 타협을 거쳐 확정된 9월 11일의 임시정부 기구를 보면 거의 모든 독립운동세력이 참여하고 있었다.

지나치게 큰 대연합 정부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출발부터 불안정성에 시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임시정부의 리더십은 급속히 여운형으로부터 안창호에게로 넘어갔지만 안창호 자신이 권력에의 의지가 박약했다. 안창호가 한성정부의 명분을 활용할 의도에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끌어들이자 임시정부의 불안정성은 더욱 증가하였다. 이승만 자신이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지도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다.(김명섭·김석원 2008; 이덕주 2009)¹²⁾ 임시정부의 지배연합이 모호하고 거대하다면 이 권위에 도

11) 한성정부의 존재는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승만이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성정부의 법통성을 강조하여 많은 갈등을 유발했기 때문이다. '전단정부(paper government)'로서의 한성정부에 대한 설명은 윤대원을 참조.(고정휴 외 2010, 94).

12) 그의 "미국 위임통치론" 사건에서 보듯이 이승만은 미국의 영향력을 통한 조선독립을 굳게 믿었다. 따라서 한

전하는 내부의 반지배연합 역시 모호하고 빈약할 것이다. 그러나 이 상황에 새로운 모순이 드러났다. 누구도 명료한 지배연합을 추구하지 않는 사이에 다수가 반지배연합이 되는 상황이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대연합 정부로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외부의 활동 보다는 내부의 권력투쟁으로 많은 역량을 소모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김구가 확고한 지도력을 장악하기 전까지 이 상황은 계속되었다.

5. 삼일운동과 한국 개신교

한국의 개신교는 천도교와 불교와 제휴하여 삼일운동을 선도했다.(이만열 2019, 5). 같은 기독교이면서도 삼일운동을 외면한 천주교와는 확연히 다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삼일운동 이후 역사적의 결여와 획절한 개신교 인사들로 인해 개신교의 역할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음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개신교는 삼일운동을 주도한 정치연합이 대연합으로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천도교와 협력하여 삼일운동을 전개하는 데 적극적이었을 뿐 아니라 거사에 따른 구체적 업무 분담에도 참여했다. 예컨대 독립선언서의 기초와 인쇄는 천도교 측이, 지방 분송은 개신교측이 주된 책임을 맡았다.(이만열 2019, 5). 독립선언서를 일본 정부와 귀족원에 전달하는 업무는 천도교 측이, 미국 대통령과 파리평화회의에 전달하는 업무는 개신교 측이 맡았다. 특히 삼일운동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단계에서 개신교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확대되었다. 운동의 주동세력이 뚜렷한 311개 지역 중 개신교가 78개, 천도교가 66개이고, 합작지역이 42개 지역이었다. 12월까지 투옥당한 19,525명의 사람들 중 종교가 밝혀진 사람으로 개신교인은 17%, 천도교인은 11%였다.(이만열 2019, 6).

이만열은 당시 한국인의 인구 구성에 대비해 볼 때 개신교인들의 역할은 더 분명해진다고 말하고 있다.(이만열 2019, 6). 당시의 추정 총인구는 1,600만 명이고 개신교인은 21만 2,700명 정도였다. 전체 인구의 1.3~1.5%로 정도 추정되었지만 주동세력 면에서는 25~38%, 투옥당한 사람들 면에서는 17~22%를 차지하고 있었다. 천도교는 명부등록자만 자칭 300만 명이었는데 이에 비하면 한국 개신교가 삼일운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를 잘 파악할 수 있다. 참여율이 높은 만큼 일본의 박해도 다른 종교에 비해 심했다. 같은 해 10월에 개최된 장로교 제8회 총회에 보고된 바를 보면 사망자가 52명이고 체포된 자가 3,804명이었는데 장로교 전체 목사와 장로 1,024명 중 13%가 체포자 수에 들어가 있었다. 개신교의 지도부가 매우 적극적으로 민중과 함께 했음을 보여주는 수치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개신교가 삼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유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있다. 이만열은 개신교인들의 민족의식과 개신교단의 조직화 그리고 신앙과 행동의 일치 노력을 들고 있다.(이만열 2019, 7). 첫째, 당시 제3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서구 기독교 제국들의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에 적대적이었다. 반면에 조선은 비기독교국가인 일본의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적 이념을 기초로 한 민족의식을 함양할 수 있었다. 둘째, 개신교의 교단이 조직화됨으로서 삼일운동의 전국 확산에 이바지한 측면이 있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봉쇄된 상황에서 오로지 교회만이 종교 행위를 빙자한 회집의 가능성이 열려있었다. 특히 총독부와 개신교 선교사 간의 정교분리협약이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가능성을 보장해주고 있었다. 셋째, 이와 더불어 개신교는 전통적으로 신앙과 행동의 일치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만세시위가 전개되면서 개신교회들은 신앙적 행위와 정치적 행위를 일치시키는 통교 문들을 회람하고 있었다.

삼일운동을 주도하는 삼일대연합에 대한 개신교의 기여는 1919년에 한정되어있지 않다. 이만열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개신교는 이미 포교 초기부터 반봉건·반외세의 성격을 강하게 지닌 자주적 조직으로 성장했다.(이만열 1991, 101-113). 성서지상주의, 이신득의의 교리, 만인제사장설을 기초로 하는 개신교의 전래는 교회중심, 전례중심, 사제중심의 천주교 전래와 확연히 다른 정치적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선말기의 피폐한 사회상을 개혁하려는 지성인들이 개신교에서 희망을 보았고 이들이 개신교 내에서 평신도 중심의 기독교적 지성을 형성하게 되었기 때문이다.¹³⁾ 삼일운동 이전에 개신교에

국인들이 모인 상해임정의 역량에 거의 기대를 하지 않았다.(고정휴 외 2010, 397-429).

자리를 잡은 기독교적 지성들은 사회부패의 척결을 강조함으로써 이미 봉건적 약탈체제와 충돌하고 있었다. 한글성경의 보급과 문맹퇴치교육은 삼일운동이 쉽게 대연합을 만들고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문화적 배경을 이루고 있다. 한글 성서의 보급은 1886년까지 15,690권이었는데 1892년에는 578,000권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다.(이만열 1991, 106).

민족의 자주독립에 대한 개신교의 역할이 지대했던 반면 중대한 약점도 노출하고 있었다. 이 약점은 개신교적 서방국가 특히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적 태도였다. 대한제국은 강대한 일본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방법으로서 미국의 호의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개신교의 기독교지성인들도 종교적 친화성과 지정학적 합리성이라는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경향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미국에 대한 개신교의 사대주의는 중국에 대한 유교의 사대주의가 모양을 달리한 것이었다. 유교에서 개신교로 전향한 대표적 지성인 중 하나인 윤치호가 이 점을 잘 지적하고 있다.

“오랜 세월 동안의 중국 의존은 조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나라는 강대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조선 사람이 예속적으로 되는 것은 오리가 물로 가는 것만큼 자연스럽다.”(김명섭·김석원 2008, 62에서 재인용).

오리가 물로 가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외세의존의 본능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적 지성들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미국에 의존하려는 외교독립론에 깊이 함몰되어있었던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로 인해 임시정부의 거대 지배연합은 외교독립론과 무장투쟁론으로 분열하고 있었다.(한국역사연구회·역사문제연구소 1989, 488-518). 기독교적 지성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임시정부 지배연합의 주류는 국제사회에 대한 독립청원을 주요 활동으로 삼고 있었다. 반면에 소련의 지원에 명맥을 유지하던 무장투쟁군 계열은 이러한 독립청원활동에 실망하고 있었다. 현실에 있어서는 당연히 독립청원과 무장투쟁이 효율적으로 병행해야 하지만 지배연합 내의 극심한 이데올로기적 균열로 시달리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이승만의 위임통치 청원 사건이 발생하자 내부분열증상은 극에 다다랐다. 임시정부의 법통성에 대한 창조파와 개조파 그리고 옹호파의 갈등으로 이어졌고 1930년대의 중요한 시기에 임시정부의 역량을 저하시켰던 원인이 되었다.

6. 삼일운동을 통해본 역사적 교훈

삼일운동은 한민족과 대한민국의 탄생을 가능하게 한 역사적 계기였다. 반만년 동안 한반도에서 무수한 정치 운동이 발생했지만 삼일운동이야말로 최초로 한반도의 거주민 대다수가 참여한 운동이었다. 당연히 삼일운동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계승한 남한 정부의 정당성과 법통이 되었다. 대한민국을 계승하지 못한 북한 정부가 자신들이 정의한 항일무장투쟁 즉 혁명전통을 정당성의 기반으로 삼은 것과 대조적이다.(조은희 200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삼일운동을 주도한 세력은 지배연합의 관점에서 볼 때 지나치게 큰 대연합이었다. 과립평화회의의 독립청원을 목표로 삼은 수단으로서 삼일대연합은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대한독립이라는 실질적 목표를 기준으로 볼 때 이 정치연합은 매우 비효율적이었다. 이 연합은 거의 모든 정파와 지역을 다 아우르고 있었기 때문에 상호 이익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를 가진 정파들의 연합이었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불가피하였다. 또한 일본이 제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던 때문에 전환의 문턱도 너무 높았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독립청원은 일본의 패망으로 국제적 갈등 구조가 전환된 1943년이 되어서야 카이로선언으로 일부 수용되었다.

13) 대표적으로 이승만을 들 수 있다. 기록을 보면 그는 유교의 대체물로서 개신교를 받아들였고 만인사제설에 입각한 국민주권론을 주장하다 투옥되기도 하였다.(김명섭·김석원 2008). 나아가 율법과 전통과 죄악으로 부터의 해방을 강조했으며, 개인영혼의 구원만을 주장하는 보수 교리는 기독교의 참 이치를 모르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수치스런 조선을 개혁하기 위해 오직 기독교적 문명국가의 건설이 새로운 희망이라고 생각했다. “교회가 자유와 평등을 내용으로 한 신앙에 기초하여 정신혁명운동을 전개할 때 필연적으로 사회적 문명개발과 정치혁명이 이루어진다”고 이승만은 주장했다.(이덕주 2009, 78).

삼일운동의 정치적 의미는 대한민국이라는 민족국가의 형성에 있다. 1919년 이전까지 한반도에서는 근대적 의미의 민족국가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라는 민족국가가 부각되기 시작한 이유는 한일합방에 따른 한민족의 고통 때문이었다. 민족과 민족국가의 개념은 비록 구한말 이후에서야 수입되었지만 한민족의 고통을 제거하는 새로운 공동체의 목표로 삼기에 적합했다. 민족국가 수립은 삼일운동의 필수적이고 당연한 귀결이었다. 특히 삼일대연합은 한반도의 주민 모두에게 정당성을 요구하기에 충분했으며 이후의 정치체제 구성에서 큰 바탕이 되었다.

삼일운동이 국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카이로선언을 제외하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세계제2차대전이 발발하면서 일본이 독일, 이탈리아와 함께 주축국이 되고 영국과 미국이 연합국으로 대립하면서 대한민국의 독립청원은 기회를 갖게 되었다. 특히 삼일운동의 정통성을 계승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존재와 이 정부를 중심으로 진행된 항일무력투쟁이 국제적인 관심을 끌어들임으로 마침내 카이로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을 거론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조차도 강대국의 이해관계로 인해 신탁통치의 여지를 남긴 선언이 되었다.(고정휴 외 2010, 63). 중국의 1919년 5·4운동 발발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은 확인되지만 여타 국가들에 대한 영향은 계속 발굴 중이다.(동북아역사재단 2010).

삼일운동에서 개신교는 독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천도교 및 불교와 제휴하여 삼일운동을 선도하였을 뿐 아니라 이후의 전개에도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전체 인구에서 1% 남짓한 점유율을 보였지만 주동세력 면에서는 25~38%, 투옥당한 사람들 면에서는 17~22%이다. 개신교인들의 민족 의식과 개신교단의 조직화 및 신앙과 행동의 일치를 강조하는 당시 교회 지도자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중대한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적 태도를 불러일으켰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독립운동에서는 외교독립론으로 나타났는데 무장투쟁론과 대립하면서 독립운동의 분열을 초래하고 1930년대의 중요한 시기에 임시정부의 역량을 저하시켰다.

7. 삼일운동의 과제와 결론

이 논문은 삼일운동에 대해 이미 발굴된 자료를 중심으로 지배연합분석을 적용해보는 시도이다. 특정한 이데올로기에 의존하기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지난 일의 이해와 앞으로 발생할 과제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하였다.

삼일운동의 정치적 의미는 매우 뚜렷하다. 삼일운동은 대한민국이라는 민족국가 형성의 기초가 되었다. 삼일운동을 통해 한민족은 제1차세계대전의 전승국 식민지라는 매우 불리한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거주민 거의 대부분이 참여한 대연합을 기적적으로 이루었다. 비록 임시정부의 형태였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민족국가도 이러한 역사적 근거에 의해 1919년에 건국되었다. 삼일운동이야말로 한민족의 상호신뢰와 역사적 영감을 공급해주는 원천이 되고 있다.

삼일운동은 한반도 통일의 필연성에 대한 근거이기도 하다. 해방 이후 남과 북에 따로 형성된 두 개의 정부 즉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삼일운동의 정당성과 법통으로 보아 외세에 의해 강제로 분리되어 나타난 두 개의 분리 정부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이다. 내부적 요소와 외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삼일운동은 한반도 공동체 지배의 정당성과 법통을 보장하는 가장 중대하고 현실 가능한 역사적 기초이다.¹⁴⁾ 또한 한반도의 통일은 삼일운동의 가장 절실한 역사적 과제로 남아 있다.

지배연합분석으로 볼 때 삼일대연합은 매우 비효율적이었다. 크기의 원칙과 이데올로기의 원칙, 그리고 전환의 문턱이라는 지배연합분석의 3대 명제에서 모두 불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국제사회에 대한 독립청원을 핵심 전략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과도하게 확장된 연합구조를 가지게 되었다.¹⁵⁾ 이로 인해 서로 충돌하는 이해관계의 조정에 운동의 역량 대부분을 소진하고 있었다. 강대국들의 경

14) 때로 도저히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신화를 기반으로 삼대세습을 이어가는 체제들도 가능하다.

15) 역사적 대안에 대한 검토로서 만일 처음부터 무장투쟁을 주 전략으로 삼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도 연구의 주요 과제이다. 아마도 삼일운동만큼의 광범위한 연합 형성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실효적 지배를 향한 효율성은 매우 높았을 것이다.

쟁으로 나타난 이데올로기적 차이도 운동의 지속성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특히 러시아의 볼셰비키혁명 이후 자본주의와 현실적 경쟁구도를 확립한 사회주의의 발달과 전파로 삼일운동 내부의 경쟁도 국제적 이데올로기 경쟁을 그대로 모방하게 되었다. 1930년대까지 동아시아의 패자로 인정을 받고 있었던 일본의 국제적 지위로 인해 전환의 문턱도 너무 높았다. 일본의 식민지배연합은 너무도 효율적이고 강고하였다. 민족적 열망의 당위성은 확보하고 있었지만 실효적 통치를 추구하기에 삼일대연합의 역량은 너무 약소했다.

삼일운동이 이후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민주운동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 4월 학생의거나 6월민중항쟁 그리고 2016년 촛불시위 등은 비폭력적 방법으로 권력의 변동을 초래한 역사적 사건들로 삼일운동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2016년 촛불시위는 삼일운동 이후 역사상 두번째로 대연합이 형성된 사례로 볼 수 있다. 비록 일시적이었지만 크기의 원칙과 이데올로기의 원칙, 그리고 전환의 높은 문턱을 돌파하고 체제의 변혁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 두 사건의 구조와 전개 그리고 그 결과에서의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개신교는 삼일운동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삼일운동의 발생과 전개, 그리고 그 결과물로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에 이르기까지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미 그 이전 세대부터 진행되어오던 반봉건·반외세의 주도자로서 대한민국 수립의 공헌자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친미사대주의적 태도를 버리지 못함으로 해서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이만열의 연구를 참조하면 삼일운동에 대한 한국 개신교의 공헌을 볼 때 앞으로도 한국 개신교는 한민족의 자주독립과 통합과 평화 정착을 위해 기여할 바가 많이 있다.

삼일운동은 대한민국 독립의 대의를 기반으로 하는 운동이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를 동원할지라도 사대주의와 병존할 수는 없다. 국제체제에서 동맹관계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민족의 독립적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민족국가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삼일운동을 기념하면서 성조기를 휘두르는 일은 삼가해야 한다.

<참고문헌>

-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백주년기념회). 2019. “삼일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https://www.together100.go.kr/>
- 강광식. 2008. “조선조 유교정치체제의 특징적 지배구조와 권력구조의 변동양상—지배연합의 동태성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08년 추계학술회의. 2008. 9. 7-38.
- 고정휴 외. 2010.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현대사적 고찰』 파주 : 나남.
- 권보드레. 2015. “1910년대의 ‘혁명’—3·1운동 전야의 개념과 용법을 중심으로—” 『개념과 소통』 15호 (6월) : 47-82.
- 김명섭·김석원. 2008. “독립의 지정학 : 대한제국(1897-1910) 시기 이승만의 지정학적 인식과 개선교.” 『한국정치학회보』 42권 4호 : 59-86.
- 김용흠. 2010. “한국 중세 국가 연구의 방향과 사회인문학.” 『동방학지』 150권 : 41-85.
- 김정인. 2017. “초기 독립운동과 민주공화주의의 태동.” 『인문과학연구』 24권 : 31-52.
- 김정희. 2019. “합태영을 통해서 본 삼일운동과 기독교의 관계.” 『한국정치외교사논총』 40권 2호 : 5-50.
- 김중섭. 1996. “일제하 3·1운동과 지역 사회 운동의 발전—진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0집 (여름호) : 359-387.
- 독립기념관. 1989. 『3·1독립운동』 www.no.go.kr/app/nl/common/download.jsp?file_id=FILE-00003347823. 1989.5.
- 동북아역사재단 편. 2010. 『3·1운동과 1919년의 세계사적 의의』 서울 : 동북아역사재단.
- 미국사연구회 편. 1992. 『미국 역사의 기본 사료』 서울 : 소나무.
- 박경숙. 2009. “식민지 시기(1910년-1945년) 조선의 인구 동태와 구조.” 『한국인구학』 32권 2호 : 29-58.
- 박지현. 2014. “프랑스 외무부 문서로 본 대한제국의 국제관계.” 『사림』 48권 : 27-60.
- 박진철. 2016. “1919년 3·1운동과 ‘국민’의 탄생 그리고 헌법.” 『인문사회 21』 7권 5호 : 625-639.
- 백종국. 2009. 『한국 자본주의의 선택』 파주 : 한길사.
- 백종국. 1993. “정치경제적 현상의 지배연합분석.” 한국정치경제학회 편. 『한국정치경제학이론』 (서울 : 신유), 8-28.
- 서희경. 2012.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 파주 : 창비사. *
- 의암손병희선생기념사업회. 1967. 『의암손병희선생전기』 서울 : 보성사. *
- 정동귀. 1982. “20세기 초두에 있어서의 미국의 대한정책과 한국의 대응—태프트-계협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16권 : 249-266.
- 윤대원. 2010. “임시정부법통론의 역사적 연원과 의미.” 고정휴 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현대사적 성찰』 (파주 : 나남), 91-128.
- 이덕주. 2009. “이승만의 기독교 신앙과 국가건설론—기독교 개종 후 종교활동을 중심으로 (1899-1913)—” 『한국기독교와 역사』 30호 : 35-84.
- 이만열. 2019. “3·1운동과 한국 교회.” 2019년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회원총회-3·1운동 100주년 기념강연. 서울영동교회 교육관.
- 이만열. 1996. 『한국사연표—개정판』 서울 : 역민사.
- 이만열. 1991. 『한국기독교와 민족의식』 서울 : 지식산업사.
- 이문영. 2018. “1960-1970년대 유사역사학의 식민사학 프레임 창조와 확산.” 『역사문제연구』 39권 : 218-262.
- 이연복/윤종일. 1994. 『사료 한국사』 서울 : 신서원.
- 이정식. 1982. 『한국민족주의운동사』 서울 : 미래사.
- 이종훈. 2010. “두 가지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과 우크라이나 독립에 나타난 민족자결론의 전개.” 『이화사학연구』 41집 : 287-316.

- 이치만. 2010. “신간회운동과 기독교계의 대응—기독교계 민족운동진영을 중심으로.” 『장신논단』 39집 : 117-141.
- 조은희. 2009. “남북한 정통성 만들기 역사와 비교.” 『통일과 평화』 창간호 : 243-284.
- 차승기. 2009. “기미와 삼일—해방직후 역사적 기억의 전승.” 『한국현대문학연구』 28집 : 309-334.
- 한국역사연구회·역사문제연구소 편. 1989. 『3·1민족해방운동연구』 서울 : 청년사.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정치적 정통성 연구—남북한의 경우를 중심으로—』 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한승연. 2011. “일제시대 근대 ‘국민’ 개념 형성과정 연구.” 『정부학연구』 17권 1호 : 57-107.
- 황하빈/강정인. 2017. “제헌헌법 전문의 ”대한민국“은 무엇을 지시하는가: 전문삽입과정과 당대 정치현실을 중심으로.” 『한국과국제정치』 33권 2호 : 137-169.
- Cohen, Ronald, and Elman R. Service, eds. 1978. *Origins of the State, The Anthropology of Political Evolution*. Philadelphia : ISHI.
- Lenin, V.I. 1975. *The Lenin Anthology*, Selected, edited, and introduced by Robert C. Tucker. New York : Norton.
- Link, Arthur S. et al., eds. 1984. *The Papers of Woodrow Wilson*. vol. 45.
- Putnam, Robert D. 1988. "Diplomacy and Domestic Politics: The Logic of Two-Level Ga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2 (3): 427-460.
- Todd, Lewis Paul, and Merle Curti. 1977. *Rise of the American Nation*, Heritage Edition.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 Weber, Max. 2011. 『소명으로서의 정치』 최장집 엮음/박상훈 옮김. 서울 : 폴리테이아.